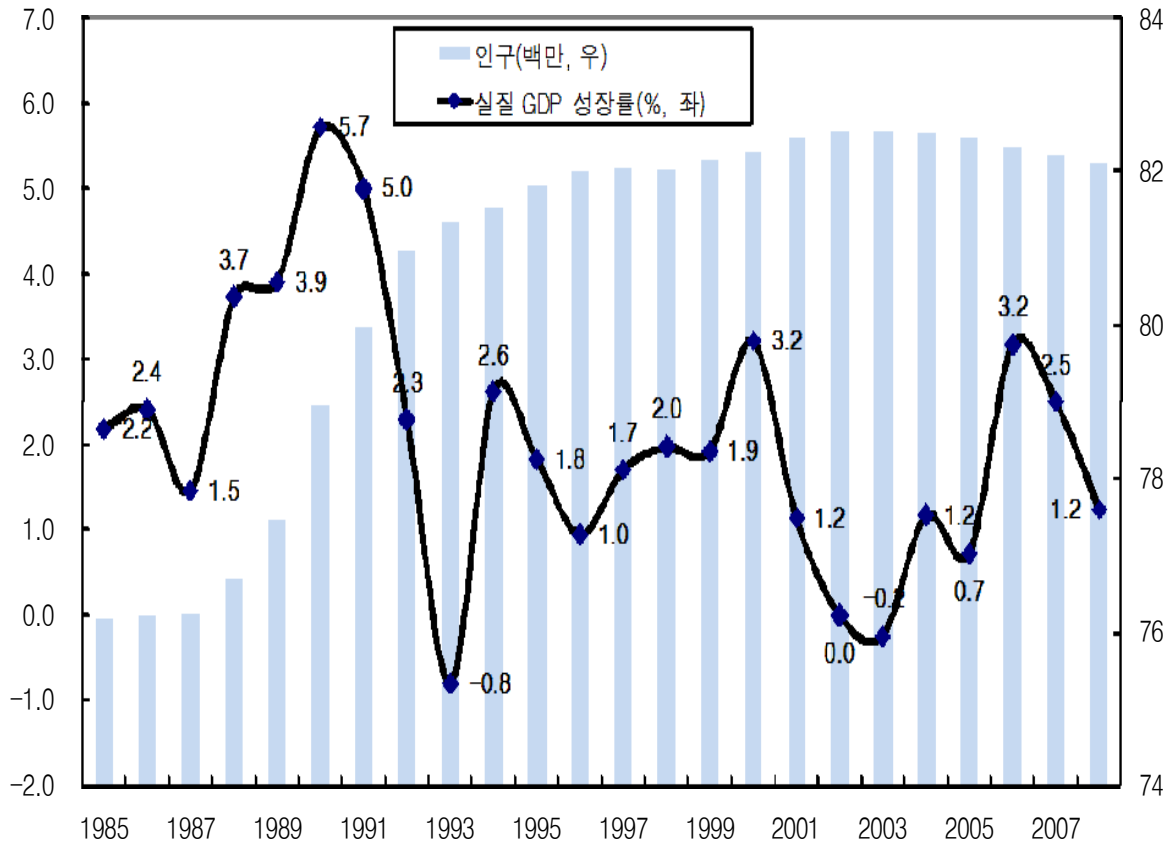


V. 독일

- FY2010 : 2010년 1월 ~ 2010년 12월
- 2010년도 독일 예산안 통과 일자
 - 2009년 7월 2010년 예산안 및 2009-2013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 2009년 12월 16일 수정예산안 독일내각 통과
 - 2010년 1월 셋째 주 하원 제1독회
 - 2010년 2월 12일 상원 심의 예정
 - 예산안 의회 통과 예정일자 : 하원 - 3월 셋째 주, 상원 - 3월 26일
 - 2010년도 예산 4월 중 법적효력 발생 예정
- 출처
 - Bundeshaushalt 2009, Finanzplan des Bundes 2009 bis 2013 (2009.7)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Pressemitteilungen (2009.12.16)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www.bundesfinanzministerium.de/)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www.bmas.de/)
 - Bundesagentur für Arbeit (www.arbeitsagentur.de/)
 -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 (2009.10)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10)
 - OECD, Economic Outlook (2009.11)
 - Kiel Institute (www.ifw-kiel.de)
 -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www.cesifo-group.de/)
- 환율 : 1유로 = 약 1,774.4원(2009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08년 경상GDP 2조 9,097억달러(우리나라 2.2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08년 기준 88.3%(우리나라 107.0%)
- 인구 : 8,212만명(2008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0년 독일경제는 플러스성장 기대, 민간소비, 생산량 및 실업률 등의 기타 경제지표는 여전히 위축
- (재정전망) 2010년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7.3% 증가하여 총 3,254억유로, 이중 신규차입은 858억유로, 부채비율은 GDP 대비 78%로 전망

◇ 예산기조

- 차입규모를 점차적으로 감소시키고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핵심
- 금융시장 안정화법, 성장촉진법, 사회보장안정법, 시민부담경감법 등을 통해 정부는 경기부양 노력 지속

◇ 예산안 내용

- 2010년도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차입금이 대폭 증가해 총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
- 총지출은 3,254억유로로 연금 및 건강보험, 노동시장, 국방, 교육 및 연구부문에 집중 투자

◇ 주요정책

- (경제위기 대응조치) 제1, 2차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시민부담 완화, 고용시장 개선,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 (재정건전화) 독일 기본법 제109조 및 제115조 개정, 2011년부터 단계적인 차입금 감소 노력 시행 예정
 - 또한 재정안정화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재정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고용촉진 및 지원) 2010년도 독일연방노동사회부의 총예산은 1,470억유로이며 이 중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지원금은 총 233억유로 규모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2010년도 독일경제는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서는 반면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민간 소비 및 생산량은 여전히 위축
 - (경제성장률) 2010년도 독일은 1.6%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2009년 5월 전망에서 약 0.4%p 상승)
 - (수출) 2009년도 수출둔화 현상은 세계적인 경제회복에 힘입어 올해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임
 - (민간소비)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은 불가피하며 설비투자 및 건물투자는 감소 예상
 - 이에 대한 방편으로 정부는 감세, 건강보험료 인하, 자녀수당 지급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에너지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계소비가 촉진됨
 - (생산량) 2010년에도 유희생산력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고용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실업률) 2009년 12월 기준 독일의 실업자 수는 330만명, 실업률은 7.8%로 집계됨
 -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 경제예측에 따르면 GDP 성장률이 2011년부터 연간 2%씩 증가할 것이고 실업률은 차츰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V-1> 독일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

(단위: %)

	EU 집행위원회		OECD		IMF		독일중앙은행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GDP 성장률	-5.0	1.2	-4.9	1.4	-5.3	0.3	-4.9	1.6
CPI ¹⁾	0.3	0.8	0.2	1.0	0.1	0.2	0.3	0.9
실업률	7.7	9.2	7.6	9.2	8.0	10.7	8.2	9.1
수출 ²⁾	-15.4	2.6	-14.4	7.2	-16.9	0.9	-14.8	4.5
수입 ²⁾	-9.5	2.0	-8.2	5.1	-11.4	-1.9	-8.2	3.9

주: 1) CPI: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2) 수출/수입: 재화 및 용역에 해당

자료: EU 집행위원회, Economic Forecast, 2009년 10월

OECD, OECD Economic Outlook 86, 2009년 11월

IMF, Economic Outlook, 2009년 10월

독일중앙은행,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2009년 12월

나. 재정전망

1) 세입 및 세출전망

□ 독일정부는 2009년 7월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2013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에 2010년도 수정예산안 발표

○ (재정수입) 2010년 재정수입은 3,254억유로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7.3% 증가한 형태

- 조세수입은 2,119억유로로 이는 2006년도의 조세수입과 유사한 수준

○ (재정지출) 2010년 재정지출은 GDP 대비 13.3%로 예상되며 이는 2008년 11.3%와 2009년 12.9%를 상회, 전년 대비 약 310억유로 증가

○ (재정적자) 차입을 제외한 재정수입에서 이자를 제외한 지출액은 2010년 485억유로로 2009년의 76억유로를 크게 웃도는 수준

○ (신규차입) 2010년도 신규차입은 858억유로로 이는 총지출 대비 26.4%, 전년도

16.2%, 2008년 4%에서 대폭 상승

-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차입금 발생규모는 435억유로
-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차입금은 총 233억유로 규모이며 이 중 160억유로는 연방노동청에 할당
- 독일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102억유로 규모 차입금 발생, 이 중 39억유로는 정부 보조금
- 제1, 2차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차입금 발생규모는 총 40억유로

<표 V-2> 연방정부 중기재정계획 (2009~2013) - 수정예산 반영 이전

(단위: 십억유로, %)

	2008	2009 (추정치)	2010 (예산안)	중기재정계획		
				2011	2012	2013
I. 재정지출	282.3	303.3	327.7	321.1	318.3	313.5
전년 대비 증가율	4.4	7.4	8.0	-2.0	-0.9	-1.5
II. 재정수입	282.3	303.3	327.7	321.1	318.3	313.5
조세수입	239.2	224.1	213.8	221.9	232.4	240.6
세외수입	31.5	30.2	27.8	27.5	27.2	27.0
자본수입	6.7	2.0	2.3	3.3	3.6	3.6
신규차입	11.5	49.1	86.1	71.7	58.7	45.9
III. 투자지출	24.3	32.8	48.6	43.3	39.1	35.0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09 bis 2013, 2009년 7월

<표 V-3> 연방정부 2010년도 수정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2008	2009 (2009년 2차 추경 반영)	2009 (2009년 11월 기준)	2010 (예산안)
I. 재정지출	282.3	303.3	294.5	325.4
전년 대비 증가율	4.4	7.4	4.3	7.3
II. 재정수입	282.3	303.3	294.5	325.4
조세수입	239.2	224.1	227	211.9
세외수입	31.5	30.2	30	27.7
자본수입	6.7	2.0	2.0	2.3
신규차입	11.5	49.1	37.5	85.8
III. 투자지출	24.3	32.8	28.5	28.7

자료 : 독일 재무부, 2009년 12월

2) 독일정부 재정수지

□ 각 기관별로 발표한 현재 독일의 재정수지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여전히 적자 재정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며 정부는 현재 각종 정책을 제시하여 재정여건을 개선 시키기 위해 노력

○ IMF, OECD 및 독일연방 경제연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2010년 재정적자는 2009년보다 증가한 GDP 대비 4.6%~5.3%로 예측

○ IMF와 OECD는 2011년부터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표 V-4>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IFO (2009년 12월) ¹⁾	0.0	-3.0	-5.1	-5.5
KIEL (2009년 12월) ²⁾	0.0	-3.0	-5.2	-5.8
IMF (2009년 10월)	-0.1	-4.2	-4.6	-3.6
OECD (2009년 11월)	0.0	-3.2	-5.3	-4.6

주: 1) IFO: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2) KIEL: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3) 독일정부의 부채비율

□ 독일정부가 예상한 2009년도 부채비율은 GDP 대비 73%였으며 2010년에는 7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IMF의 2009년 가을 전망에 따르면 2010년 독일정부의 부채규모가 80%를 상회하며 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90%가 넘을 것으로 예측

<표 V-5> 독일정부 총부채 규모 (IMF/EU 전망)

(단위: GDP 대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IMF	63.44	67.11	78.69	84.52	87.84	89.66	90.08
EU집행위	65.0	65.9	73.1	76.7	79.7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년 10월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2009년 10월

2. 예산기조

-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1년부터 차입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소할 계획
 - 2010년도 861억유로의 차입 규모를 2013년까지 459억유로로 축소
 -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차입규모를 감소시켜 2016년까지 GDP의 0.35% 또는 100억유로 규모로 줄임

- 독일연방공화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로 인해 2010년 전반적인 독일 경제는 2009년도에 이어 균형 상태로의 회복은 힘드나 정부는 여러 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 지속
 - 연방정부는 자동안정장치를 적용해 2009년부터 각종 국민 세금을 완화했으며 고용 시장 지원 등에 지출을 증가하는 등 경제완충 효과를 기대
 - 금융시장 폭락을 막기 위한 구제금융안으로 금융시장 안정화법(Finanzmarkt stabilisierungsgesetz)을 2008년 제정하여 시행
 - 2009년 12월 성장촉진법(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안이 독일 하원을 통과, 이는 가계 및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
 - 2010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사회보장안정법(Sozialversicherungs - Stabilisierungsgesetzes)안은 실업자 보조 및 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에 대한 지원으로 시민들의 보호수단 역할
 - 제 1, 2차 경기부양책 및 시민부담경감법(Bürgerentlastungsgesetz)으로 경기촉진을 기대
 - 올해도 연장 시행되는 위 정책들은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인하, 연금 증액 등의 형태로 가계부문 지원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내역

- 2010년도 재정수입 중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감소한 반면 차입금은 대폭 증가해 총 재정수입은 3,254억유로로 전년 대비 7.3% 증가할 전망
 - 2010년 조세수입은 총 2,119억유로로 전년 대비 약 5.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의 시행 결과임
 - 소득세 인하, 에너지세법 및 탈세방지법의 개정, 법인세 및 상속세 개정, 시민부담 경감법(Bürgerentlastungsgesetz) 및 성장촉진법(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 등의 시행
 - 2010년도 개인 및 기업의 재정부담은 총 260억유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나. 세출내역

- (교육 및 연구) 2010년도 교육 및 연구에 약 108억유로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
 - 정부는 교육분야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저소득층 및 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자금 지원
 - 아동의 학교 입학에 맞추어 각종 언어시험을 통해 독일어 구사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노력 추진
 - 정부는 고등교육기관에 재정 지원
 - 정부는 향후 4년간 독일 교육 및 연구분야에 총 120억유로를 추가 지급 계획

- (경제협력 및 개발) 2010년 경제협력 및 개발 항목에 총 58억유로가 할당
 - 연방정부는 행정부처인 경제협력 및 개발부(BMZ)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협력 및 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왔음

-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상환펀드를 통해 1억유로를 지원
 - BMZ는 2010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 4,400만유로를 배정받게 되며 향후 3년간 식량 조달 목적으로 총 7억유로를 소요
 - 독일은 배출권 거래세의 수입을 공적개발원조 및 개발정책에 사용
- (내무부) 2010년 독일 내무부(BMI) 예산은 56억유로인데 이 중 37억 7,000만유로가 국가안보에 사용될 예정
- 연방경찰청에 24억유로를 배정하고 그 외 범죄수사단, 재난구호, 이민자 및 난민 등의 항목에 대한 지원 추가
- (국방 및 기타) 2010년 투자 예산은 311억유로이며 이는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
- 2009~2010년 투자 및 상환펀드의 수입 중 2억 6,000만유로 이상은 국방부(BMVg)의 군수물품 조달, 2억 5,000만유로는 군인 막사 설치 지원, IT 기술개발에 5억유로 지급
- (환경 및 기후변화) 환경정책에서 기후변화에 대응, 자연보호, 에너지 절감, 혁신 등이 주요 과제
- 독일연방환경부(BMU)는 올해 15억 8,000만유로 이상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이는 지난해 대비 2억유로 이상이 증가한 금액
 - 폐기물처리 시설, 환경혁신 프로그램, 자동차 매연필터 설치 대상 확대 등에 자금 지원
- (경제 및 기술지원) 2013년까지 연간 5억유로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1차 예산안보다 1억유로 증가한 형태
- 기존 연구 활동에 유리하도록 재정지원 확대, 독일 국립 항공우주연구센터(DLR)의 연구에 1,750만유로 추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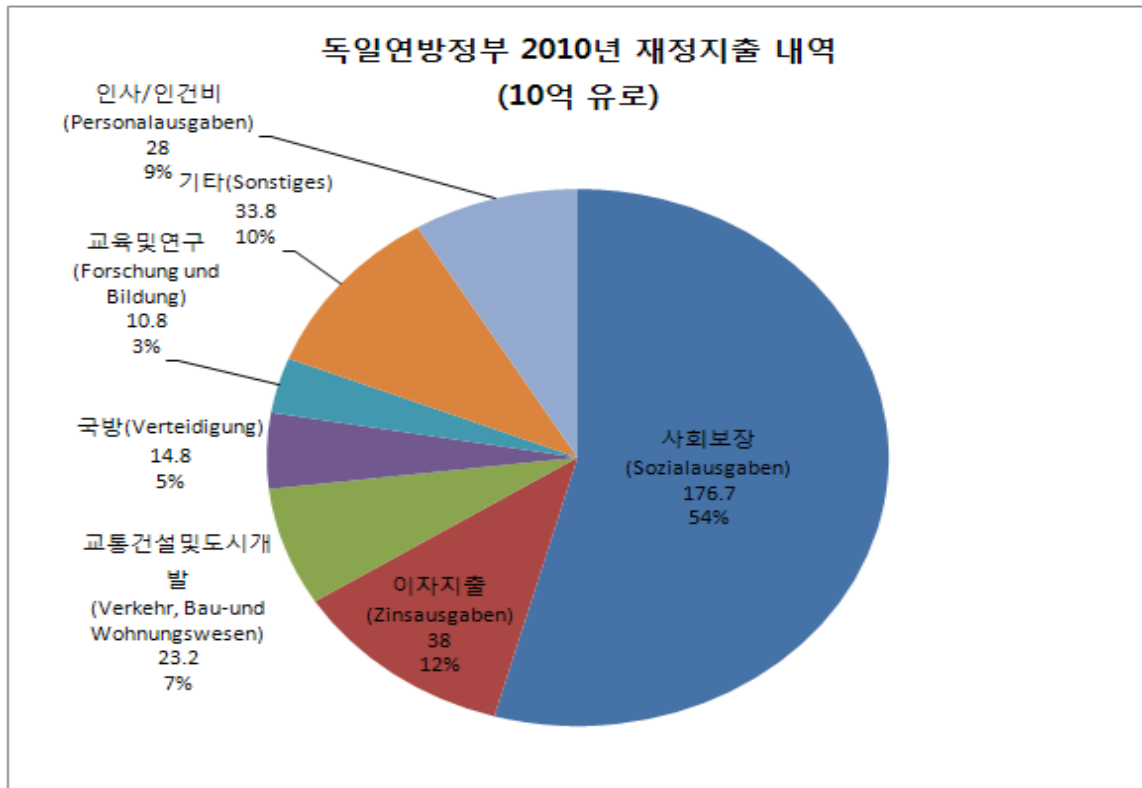
- 연구활동 촉진을 위한 재정투입 비용으로 항공우주 개발에 1,600만유로, 에너지 연구에 900만유로, 정보통신기술에 1,000만유로, 동독 거주자 기술개발 투자에 1,600만유로 등을 지급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0만유로를 투입하는 등 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독일정부는 광대역(broadband) 보급을 위해 400만유로를 추가적으로 지원
- (교통 및 도시개발) 독일연방 교통·도로·도시개발부 예산은 총 264억유로 규모
- 이 중 도로, 철도, 하수시설 및 교통시설 투자에 108억유로 소요
 - 교통개발, 유럽 기후모니터링 위성 네트워크(GMES) 및 위성합법시스템(Galileo) 등에 126억유로 투자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건물 재건축 프로그램(CO₂ - Gebäudesanierungsprogramm), 도시개발,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 등에 28억유로 추가 지원
- (연금 및 건강보험) 연금은 2010년 독일연방 총예산의 약 24.6%로 808억유로에 해당
- 건강보험을 위해 정부는 수입 및 보조금으로 총 157억유로를 추가 지급
 - 1차 예산안에 118억유로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명시되었으며 수정 예산안에는 39억유로가 추가 지급될 것으로 보임
- (노동시장) 2010년도 독일의 실업자 수는 약 41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총지출은 약 233억유로
- 이 중 160억유로는 연방노동청에 할당하여 경기부양책에서 제시한 단기근로자 고용 지원금 또는 노동청 재정적자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
- (가족지원) 독일정부는 2010년도 가족지원 정책에 총 66억유로 소요
- 성장촉진법은 2010년부터 자녀수당 증액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이로 인한 추

가 지출은 5,000만유로

- 자녀수당 20유로씩 증가
- 자녀공제액 연 6,024유로에서 연 7,008유로로 상향 조정

□ (식품, 농업 및 소비자 보호) 독일정부는 식품, 농업 등의 항목에 각종 지원금 제공

- 농기업 및 농업시장에 총 4억 2,500만유로 지급
- 우유생산을 위한 초지농업 보조금으로 3억유로 지급
- 2010~2012년 바이오연료세 및 식물성연료세 인하 등



자료: 독일 재무부, 2010.1

<표 V-6> 2010년 독일연방 부처별 예산현황

(단위: 십억유로, %)

부처	2009	2010	증감률
총리실	1.8	1.8	-
외교부	3.0	3.1	3.3
내무부	5.6	5.5	-1.8
법무부	0.5	0.5	-
재무부	4.9	4.9	-
경제기술부	6.1	6.3	3.2
농업/소비자보호부	5.3	5.4	1.9
노동/복지부	126.3	153.1	21.2
교통건설부	26.7	26.3	-1.5
국방부	31.2	31.1	-0.3
보건부	7.6	12.3	61.8
환경부	1.4	1.5	7.1
가족부	6.4	6.5	1.6
후진국지원부	5.8	5.8	-
교육부	10.2	10.3	1.0

자료: 독일 재무부, 2009.6 / 주독일대사관, 2010.2

— < 2010년도 시행될 시민을 위한 정책의 주요내용 > —

- ◇ 총재정지원금은 200억유로를 상회할 전망
 - 자녀수당 지급, 자녀혜택 제공 및 취업촉진을 위한 정책에 약 23억유로 투자
 - 경기부양책으로 제시한 소득세 인하, 기본공제액 인상, 중소기업 혜택 증진을 위해 56억유로 제공
 - 2010년도 중산층 4인 가족에 대한 지원금은 총 440유로, 실업지원 및 건강보험 혜택 받을 시 142유로 추가 지급
 - 통근세 정책이 재정비뚤에 따라 30억유로 지급, 시민부담 완화정책으로 총 96억유로 배당 (요양보험 관련 재정지원 대폭 강화)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위기 대응조치

- 경제위기에 따른 제1, 2차 경기부양책의 시행으로 2009년의 491억유로에 이어 2010년도 차입금은 총 858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08년 가을부터 시행된 경기부양책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민부담 완화, 고용시장 안정, 지속적인 투자, 교육, 인프라 확대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보조
 - 2010년에는 공적의료보험제도(GKV)에 63억유로, 독일도시건설교통부(BMVBS)에 12억유로 등의 보조금 마련
 - 올해 1차 경기부양책에서 21억유로, 2차 경기부양책에서는 총 33억유로의 재정지원 예상
 - 공공기관 투자 및 연구 지원금으로 204억유로에 해당하는 특별기금인 투자 및 상환펀드(ITF) 조성
 - 2009~2010년 교육 및 기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140억유로 소요
 - 교육 및 연구에 86억유로가 소요됐으며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지역개발, 도로 소음공해 방지 등에 추가로 47억유로 투입 예정

나. 재정건전화

- 연방 상원 및 하원은 재정건전화 노력의 일환으로 독일 기본법 제109조와 제115조 개정,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입금액을 감소시킬 것을 법으로 명시
 - 2009년 말 발표된 2010년 독일연방 차입금은 총 858억유로이며 2011년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연방정부는 2016년, 주정부는 2020년까지 차입규모가 GDP의 0.35% 또는 100억유로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매년 100억유로 규모로 차입금을 축

소해 나갈 계획)

- 또한 2013년부터는 유럽연합의 마스트리흐트 조약 기준을 준수하도록 재정적자를 3%대로 감소

<표 V-7> 2010년도 수입 산정(2009년 12월 기준)

(단위: 십억유로)	
2010년도 정부 차입규모	85.8
금융 거래의 수입 및 지출의 차액	-1.0
경기부양을 위한 차입	-16.5
실질 차입 (structural net borrowing)	68.3
명목GDP (2009년 가을 기준)	2,399.0
GDP 대비 2010년도 실질 차입규모	2.8%
2016년도 0.35% 달성 위한 감소 비율	0.4%

자료: 독일 재무부, 2009년 12월

- 연방재무장관, 주경제장관 등으로 구성된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내 각 부처의 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나아가 각 정부의 재정계획을 조정함
 - 이를 위해 각 행정부는 정기적으로 자체 예산의 현황 및 재정계획을 보고해야 함
 - 행정부처의 재정상태가 연방 또는 주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자문단은 해당 지역 행정부 관계자들의 합의하에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음
 - 결의안은 주정부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결과를 문서화하여 발행함

다. 고용촉진·지원 (위 세출내역 중 노동시장 부문 참조)

- 2009년 가을 기준, 2010년도 독일의 실업자 수는 총 4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2009년 봄 예측치보다 50만명 감소한 수치

- 2009년 12월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12월 기준 실업자 수는 330만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11만 6,000명이 증가한 규모
 - 2009년 12월 기준 독일 실업률은 7.8%이며 전년 대비 불과 0.4% 상승한 수준

- 독일정부가 실업률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큰 역할을 함
 - 정부는 조업단축을 통한 업무시간 조절(야근시간 단축 등)
 - 2010년부터 조업단축수당을 받는 자의 근무기간을 18개월까지 연장하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 현재 시행중인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 및 임금조정제도 등은 독일 실업률 증가를 막는 데 일조함

- 독일연방노동사회부에 배정되는 2010년 총예산은 1,470억유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총지출은 233억유로로 이는 수정예산안 발표 이전보다 60억유로 감소
 - 연방정부는 233억유로 중 160억유로를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에 배정해 실업률 증가에 대응
 - 이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해 42억 6천만 유로 지급
 - 2010년 고용시장 전망 개선에 힘입어 연방노동청의 적자규모는 제1차 2010년 예산안보다 약 40억유로 감소
 - 지난 한 해 파산 증가로 연방노동청의 적자가 심화된 가운데 파산기금

(Insolvenzgeld)의 분담금 비율을 0.39%에서 0.41%로 상향 조정함

- 노동청은 또한 전문가 양성, 단기근로자 채용, 계약직근로자의 재계약 등에 예산 소요

○ 실업자의 구직활동 목적으로 55억유로가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제2차 경기 부양책에 남은 10억유로 소요 계획

○ 연방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2010년 연방노동청의 전체 지출규모는 약 54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연방정부 보조금 외 예산은 다음 항목에 지출될 예정

-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II)⁹⁾ 할당액으로 총 243억유로 지급

- 조업단축을 통한 기업의 고용인원 유지를 위해 약 30억유로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2억 5천만 유로 지급

- 직업교육 실시를 위해 4억유로 배정

- 실업자의 창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창업자의 실업급여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의 보조금과 사회보장비로 6개월간 월 300유로 지원받음) 또는 창업 후 2년간 일정금액의 보조금 지급 등

□ 정부의 실업률 상승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독일 경제활동 수축현상은 생산량 감소 및 인건비 증가를 부름

○ 이에 따라 2010~2011년 실업률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고용시장 규모 확대 노력이 필수

9) 독일은 HartzIV법에 의해 취업자를 위한 고용시장 촉진 목적으로 실업부조금(Arbeitslosenhilfe)와 사회부조금(Sozialhilfe)를 통합하여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II)라고 부름